의안번호	제573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12월 일 (제325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11월 27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73

제안연월일 : 2013. 11. 27.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사보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음.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도에는 총 136억7천만 달러로 이중 수도권에 45%가 집중투자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62억8천만 달러 중 63%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수도권 투자가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로 급감**하였음.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외면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이끌어 내고자 함**.

□ 제안이유

○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역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으로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선(先)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하라!
건 의 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강창희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또 다시 수면 위로 끌고 나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류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136억7천만 달러 중 45%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는 162억8천만 달러 중 63%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도권이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로 급감하였습니다.

충청권의 경우도 2011년 13억6천200만 달러에서 2012년도 7억8천200만 달러로 43%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충청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황폐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제 그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가 지방에도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살리기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